

데스크 시국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파문이 정국을 온통 뒤흔들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촛불 정부’의 이면에 자리한 불공정하고 불의한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민심의 역란’을 견뎌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능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25차례의 대책과 온갖 법률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마저 폭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마저 나오면서 국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맹탕 조사에 들끓는 민심

하지만 LH와 국토교통부 직원(1만4천여 명)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는 시민단체가 기존에 폭로한 13명 외에 겨우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맹탕 조사’라는 비난과 함께 민심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이유다. 이는 차명으로 이뤄지는 투기 거래 특성상, 공직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투기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심은 이제 LH 등 공기업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 나

분노가 희망이다

아가 정치권을 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가 권력과 자본 및 정보를 가진 기득권층의 일반화된 구조적 문제 아니냐는 것이다. 자고 나면 몇 억 원씩 올라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은, 투기할 돈도 정보도 없는 서민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복장 터질 일이기 때문이다.

다산(荅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지은 ‘이노행’이라는 우화시가 있는데 이는 작금의 현실이 조선시대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백성들에게 해악이 되는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를 길렀더니 그 고양이가 오히려 더 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이다. “백성들은 쥐 등쌀에 나날이 초췌하고/ 기름 마르고 피 말라 뼈마져 말랐네/(중략) / 그런데 너는 지금 쥐 한 마리 잡지 않고/ 도리어 스스로 도둑질을 하는구나.” 기막힌 풍자가 아닐 수 없다. 투기 세력을 막아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투기의 주체가 되는 지금의 행태를 꼭 꼬집어 말하는 듯하지 않는가.

어찌 됐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요동치면서, 오는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여권으로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공직자 투기 방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요란을 떨 거라면 그동안 여권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적폐를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LH 사태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의 전모가 밝혀지고 재발 방지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당장 여야 정치권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염불보다는 잣밥’에 눈이 어두워 정쟁에만 몰입하고 있다. 여기에 투기에 나선 공기업 직원이나 공직자들을 제대로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결국 과거 대형 부패 스캔들처럼 피라미 몇 마리만 건지고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느 LH 직원이 투기 의혹 기사에 이런 댓글을 달아 조롱한 것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는가. “털어 봐야 차명으로 해 놨는데 어떻게 찾겠나.”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물 흐르듯 지나갈 것이다.”

한두 달 지나면 결국 잊힐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자본소득과 부동산 투기로 부가 축적되는 반면 근로소득은 삶의 발판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일상화됐다. 서민들은 노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20-30세대는 경제 불황과 좁은 취업문이나 주택 가격 상승 등 불안한 미래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지 오래다. 사회 전반에 ‘영끌 빚투’ (영혼까지 끌어 모을 정도로 빚내서 투자)가 횡행하고 ‘벼락거저’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남들이 부자가 될 때 가만히 앉아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가 속출하는 등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염원이 촛불 혁명을 만들었듯이, 이제 부조리한 일상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내년은 대선의 해다.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해 보다 공정한 사회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내일에 대한 희망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세상은 좀 더 나아져야 한다.

은폐칼럼



**심명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광산구 순회사서·행정학박사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일상이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하는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까 손꼽아 기대해 보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프리랜서·예술가 등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어 지원책을 내놓지만 수개월 동안 지속된 영업 제한으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아우성이다.

최근에는 사업장·요양병원·직장·식당·사우나 등 대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재연장하여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비대면 온라인 문화 확산이라는 변화를 불러왔고, 도서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예로 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라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한 탓이다. 그와 반대로 전자책을 비롯한 전자 저널, 오디오

전자 자료 이용과 저작권

북, 북 큐레이션, 소셜미디어 자원 등 온라인 콘텐츠의 이용 빈도는 170%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다 보니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우울함과 위기가 등 정신적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자책의 대중을 통한 독서 생활이 증가한 탓이다. 전자책의 이용 증가는 국민 독서를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찬물을 끼얹듯 국내 최대의 출판단체인 대한출판협회는 한국도서관협회에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출판협회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도서관 휴관 일수가 늘어나면서 대안으로 비대면 방식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벌어져 저자와 출판사들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서관협회는 즉각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전자책 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다. 또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전자책 납품처와 체결한 구매 또는 구독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자책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서비스의 범위와 조건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따라 도서관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서관은 저작권법과 관련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제31조에는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즉 저작권법에서는 관내 열람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외 복제·전송은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구입 때부터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사회가 된 현재, 저작권법과 관련한 분쟁이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한국도서관협회 차원에서 법 조항과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왜 책을 읽을까? 축약해서 표현한다면 정서적이고 내면적인 성숙을 위해서 책을 읽지 않는가? 프란시스코 베이컨은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들고, 대담은 기지를 가진 인간을 완성하며,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것은 정확한 인간을 만든다”고 했다. 요즘 같은 세대에 독서는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누구라도 상황에 맞는 책을 자유롭게 읽음으로써 스스로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다

영국 포츠머스대학 크리스 신하 교수 연구팀은 그들 부족과 8주간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삶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도대체 시간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였다.

연구 결과는 이렇다. ‘그들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낮과 밤, 우기와 건기밖에 없으며 숫자도 4까지만 있다. 나이 개념 또한 없지만, 청소년기, 청년기 등 인생의 주요 성장 단계가 바뀌거나 부족 내에서 지위가 바뀌면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아몬드외측은 시간을 돈이나 가치로 계산하거나 환산하지 않는다. 당연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에 쫓기는 법도 없다. 오직 자유로운 삶을 누릴 뿐이다. 그들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배짱이 같은 행운의 부족이다.

현대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아몬드외측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야만인 생활을 한다며 불쌍하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잠시 시간에 대하여 통찰해보자. 원래 시간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밤과 낮이 반복되었을 뿐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종족 규모는 집대화되었기에 부족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자구책으로 누군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착안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시간 개념 때문에 사람은 항상 강제로 살 수밖에 없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은 기본이요 과로는 보너스이다. 시간 개념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달력이 필요하겠는가? 요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

가? U지점장처럼 월요일은 누굴 만나고 화요일은 무엇을 해야 하며 수요일에는 또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쇠기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 보자. 온 세상이 커다란 나무로 둘러싸여 있을 뿐 아파트나 공장은 물론이요, 자동차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다. 그냥 모래는 바다나 강에서 나뭇잎과 있으며 석유나 석회석, 철은 땅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움막집과 벌거벗은 사람들이 동물을 쫓는 모습만 간간히 눈에 띈 뿐이다.

태초에 자연은 인간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었다. 지금도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면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나면 다른 동물들과 함께 지내곤 했다. 이처럼 아몬드외측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체를 사냥했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늘 인간미가 넘쳤다. 생명체를 죽일 때에도 미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U지점장의 바쁜 일상이 우리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 아몬드외측의 삶을 통찰해 보니 오늘날 우리의 삶이 축은하기까지 하다. 우린 시간을 쪼갤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오로지 돈과 출세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불남 진달래와 개나리의 군무를 감상하는 데도 사용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시간일랑 잊어버리고 한적한 산길을 종일 걸어 보면 어떨까?

社說

허술한 행정으로 예산 축내는 일 대신 없어야

장흥군이 주민으로부터 기증받은 문화유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줄도 모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한 데 이어 또다시 혈세를 들여 매입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과 지역 문화계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8년 5월 탐진강변에 위치한 정자 ‘창랑정’을 소유자의 후손들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았다.

창랑정은 고(故) 길행식 씨가 1918년 건립했으며, 길 씨가 숨진 뒤 후손들이 “전문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해 달라”며 기증한 것이다. 이에 장흥군은 2010년 군비 2억 원을 들여 창랑정 지붕 개량과 화장실 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2018년에는 ‘창향도문화유산 제17호’로 지정했다. 한데 지난해 11월 김도(63) 씨가 자신이 창랑정의 소유자라며 군에 매입 건의서를 제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뒤늦게 장흥군이 창랑정의 소유권을 살피더니 지난 2009년 9월 후손의 한 손자

에게 상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건립자 후손 네 명이 서류까지 작성하고 장흥군에 기증했는데 불과 1년 만에 다른 사람에게 상속된 것이다. 현 소유자 김씨는 지난해 상속자로부터 창랑정을 사들인 뒤 군에 매입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장흥군은 향토문화유산 보존 명목으로 창랑정을 사들이기로 하고 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장흥군이 창랑정을 기증받은 이후 소유권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어설픈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군 측은 ‘기증’이 아니라 ‘기탁’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안내판 등에는 ‘무상 기증’이라고 확연히 명시돼 있다. 장흥군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사태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시는 혈세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전공대 정상 개교 드디어 빛이 보인다

지난해 10월 공동 발의된 이후 5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한전공대특별법)이 어제 간신히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어섰다. 한전공대가 내년 개교하기 위해서는 3월 안에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데, 이제 전망이 한층 밝아진 것이다.

한전공대특별법은 이날 세 차례 심의 끝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한전공대특별법은 오는 18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소위 통과는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심의 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신설 부작용’,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입 시 행정성 사비 초래’ 등을 법안 처리 보류 이유로 들었다.

여기에 부영그룹이 캠퍼스 부지가 기부채납한 나주 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특혜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전남도와 나주시가 제출한 부영그룹에 대한 ‘추가 이익 환수 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

나날 ‘법안 심의 소위’를 통과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오는 18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전체 합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법안 공표까지 남은 과정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공포하면 당장 학교법인 한전공대 측은 5월3일 이전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과 캠퍼스 착공 작업에 나서게 된다.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앞으로 한전공대가 차질 없이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농부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굳게 믿고 있는 말이다. 땅에 투자하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익을 낼 수는 없다. 하지만 리스크가 적고 시간이 흐를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은 여전히 인기 있는 재테크 상품으로 꼽힌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은 땅 투자의 방향을 잡을 때, 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으라고 조언한다. 먼저 어느 곳에 정부나 지자체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계획이 있는지 보라는 것이다. 어느 곳으로 도로·철도·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개설될지에 대해서

실미 많은 국민은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 여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는 판이다. 아파트 가격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현 정부와 여당이 ‘사면초가’에 물리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대국민 공개 사과와 함께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의 임기 핵심 과제로 꼽았다.

부동산 적폐

문제는 LH뿐만 아니라 주요 부동산개발 사업을 해 온 광역단체나 지자체에도 적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 역시 2000년 이후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 이익을 탐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적폐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기고



**김광호**  
여수 여양중 교사

오늘도 U지점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는 오전에 거러져 사장님을 만나야 하고 오후에는 지점장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저녁에는 건설회사 회장을 만나야 한다. 오늘도 그는 곤드레만드레로 하루를 마감할 것이다. 그는 여행길조차도 피곤이 덕지덕지 온몸에 붙어 있을 정도다. 쉬면서 자아를 찾는 여행이 아닌 시간만 남기려는 목적 없는 여행을 하기 때문이다.

매사에 그를 구속하는 틀이 있다. 바로 시간이다. 그는 출근 시간, 미팅 시간, 회의 시간, 약속 시간 등등 있지 않은 시간을 쪼개어 스스로 구속하기에 스트레스 지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

혹 지구상에 시간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부족을 아는가?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아몬드외측이다. 그들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기에 시계나 달력뿐만 아니라 년·월·주 등의 단위가 없다. 그들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1986년 당시 약 150여 명의 부족이 모여 살았으며, 현재까지 이 부족은 전통적인 사냥이나 작물을 재배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열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 부 220-0632	에 황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